고흥 나로우주센터 로켓발사대 공사 돌입

한국, 우주 주권국가 '카운트다운'

2008년 완공…세계 9번째 위성발사국
고흥군 '우주시대 중심지' 화려한 비상

나로우주센터(Naro Space Center)를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를 열어가는 '우주 주권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의 땅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주권을 이제 우주에서도 가지게 된 것이다.

▲주요 시설들=발사에 관련된 주요 통제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발사 통제동'(MCC)은 발사장과 2㎞가량 떨어져 있으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발사지휘소(MDC)와 비행안전통제센터(FSC), 발사관제센터(LCC) 등 발사에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한데 모여있다.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는 우주발사체의 조립·보관 및 각종 검사가 이뤄지며, 추진계 배관이나 각종 전자·구동장치 등 우주발사체의 주요 기능을 시험한다.

이와 함께 우주센터에 설치된 추적시스템과는 별도로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에 원격 자료 수신장비 2기와 추적레이더 1기를 갖춘 '제주추적소'가 설치된다.

나로우주센터 입구에 들어선 '우주체험관(교육홍보관)'에는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전시관, 영상관, 야외전시장 등이 들어서, 우주 개발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홍보를 맡게 된다.

▲한국 지위 격상=오는 2008년 6월께 나로우주센터에 최고 핵심시설인 발사대가 설치되면 한국은 세계 13번째의 우주센터 보유국가가 된다. 우주센터는 세계적으로 12개국이 26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10개의 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3개, 일본이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와 프랑스, 브라질, 카자흐스탄, 호주, 파키스탄, 캐나다 등도 1개씩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센터 완공에 이어 같은 해 10월께 과학기술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위성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된다. 위성제작과 발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나라의 모임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최초로 발사되는 과학기술위성 2호는 저궤도에 올려지는 100㎏급 과학기술 실험용 소형위성이긴 하지만, 완벽한 위성 발사 기술이 확보되는 오는 2015년에는 바로 이 나로우주센터에서 1.5t급 본격적인 실용위성을 발사하게 된다.

▲고흥, 항공우주산업 메카 변신=한국 최초의 우주인후보를 배출한 광주·전남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에 150만평 규모로 우주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우주시대의 중심지'로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다. 고흥군은 3년 전부터 유자축제를 없애는 대신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하고, 우주 관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주를 활용한 지역 경제발전의 꿈에 부풀어 있다.

나로우주센터 내에 있는 우주교육홍보관과 함께 동일면 덕흥리 일대에 들어설 체험형 우주항공 수련시설인 '국립 고흥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만여 평의 부지에 오는 2010년까지 국비 480억 원이 투입, 완공되는 스페이스 캠프는 연간 20만여 명이 방문, 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발사장을 내려다 본 모습. 말끔히 닦인 2차선 도로 옆으로 추진기관 시험동이 들어서 있으며, 산허리를 깎아 만든 발사장이 쪽빛 바다를 배경 삼아 자리 잡고 있다. 작은 사진은 최근 공사에 들어간 로켓 발사대 공사 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수 원조' 정형근 의원

평양 방문 추진

대북 강경파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나라당 집권을 대비한 대북 협력을 위한 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다.

정형근 의원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다음달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이 대북·통일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이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친) 대북 정책이 별로 바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원래 2월 12일부터 5박6일간 방북 일정이 확정됐었다"면서, "방북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측에서 '6자회담으로 예민한 시기인 만큼 좀 미루자'고 보류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의 방북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 신부는 한때 정 의원과 한나라당을 향해 "쓰레기는 청산해야 한다. 제거 대상이지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9> 규제완화, 아직도 멀었다

광주, '미분양' 넘쳐나는데 언제까지 '투기지구' 인가

정부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목포공항 주변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이는 바람에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대형 구조물의 신·증축이 불가능, 투자유치를 비롯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목포공항에서 '반경 3천300m'까지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고도 제한이 '반경 1천m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고도제한 완화 1조5천억 유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간단한 것이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가 풀릴 경우 당장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단·목포신항 입주기업 등 53개 업체가 앞으로 5년간 무려 1조5천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투자기업들은 5년 후부터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도 무려 1만 8천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남 서남권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도 활성화됨으로써 경쟁국가인 중국·일본 등을 제치고 조선산업 입지를 더욱 강화,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간단한' 규제완화가, 낙후된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목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는 '이례적인' 것일 뿐,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사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광주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과 건설부문의 투자를 급격히 위축시켜왔으며, 현재까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미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내림세마저 나타나고 있다. 투기 및 전매 행위가 사라진 지도 오래다. 최근 주택청약률도 최고 1.5대 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현실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정부는 그러나 '지방의 규제를 일시에 풀면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광주를 비롯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당수 광역도시를 오는 9월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1경주 '경차' 등 규제 묶여 좌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와 F1자동차경주대회도 정부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경우다. 투자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J프로젝트 부지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와 F1경주에 도입기로 했던 '경차'(競車) 역시 '사행성 산업 운운'하는 규제에 걸쳐 좌초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의 실정에 맞춘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선 지자체나 관련업계의 발목을 잡는 경우다 허다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각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운찬, 대선행보 밝힐까 내달 4일 전남대 특강

범여권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다음달 4일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이 다음달 4일 오후 4시께 교내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학생 등을 상대로 특별강연회를 진행한다. 특강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대 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강정채 전남대 총장이 정 전 총장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 전총장이 이날 광주에서 특강 형식을 통해 대선 관련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정 전 총장이 이날 이 지역 교수단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선행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